

## ■ EU 교통장관들, 강화된 해상 안전조치 조속 시행 주장

### ○ EU 교통장관 회의에서는 유럽의 해상 안전조치 기준을 높이는 방안 에 대해 논의함

- 6월 26일,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분기 각료회의에서는 EU 해상 안전지침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였음
  -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적용하고 안전 평가절차에 관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합의함
  - 또한 회원국들에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현재 국가기준을 분석해 관리체계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함
- 각료들은 EU 국가들간에 안전 규정에 관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
- 또한 각료들은 개정안이 사회, 법률,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가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해상 안전을 고양하고 미래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해상 사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역시 유럽집행위원회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
### ○ 개정지침(안)은 안전 혹은 환경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접근 거부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EU 해역 내에서 선박이 단기간 체류할 때 적용되는 1995년도 지침에 대한 개정안은 지원기구인 종신위원회(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)<sup>1)</sup>에서 검토할 예정임
- 각료회의는 종신위원회에 대해 이중 선체의 도입을 포함해 선박 선체의 안전성 강화(특히 유조선 중심)안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수행하도록 독려했음

### ○ 개정지침(안)은 금년말경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

1) 각료회의를 지원하는 위원회로서 회원국의 종신대표로 구성됨